

크리스찬아카데미-NCKK 공동기획 연속토론회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와 교회

시즌01
4차

“코로나19시대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2020년 12월 14일(월) 오후 6시

줌 회의 및 유튜브 생중계
오후 5시 50분에 동시 시작합니다.



줌 회의

링크: <https://url.kr/4BRIV8>

ID: 879 1993 0460

암호: ncck



유튜브 생중계

<https://youtu.be/5X-9zaV6LSc>

공동주최

크리스찬아카데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공동주관

크리스찬아카데미, NCKK신학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와 교회”에 초청합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재난 상황은 우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구 위에 살아온 인간의 삶 전체와 그 삶이 이루어 낸 인간문명 그 자체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어 왔던 온갖 자화자찬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묻게 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교회의 과오와 책임은 더욱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동체 보다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 교회로서 사는 새 길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과 밖에서 새 삶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들과 과제들을 가지고 연속토론회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사회와 교회의 변화를 향해 많은 분들이 함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 9. 1

크리스찬아카데미 채수일 이사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 무

시즌 1)

- 1차 9월 14일(월) 오후 6시 / “코로나19 이후 세계와 교회”
- 2차 10월 12일(월) 오후 6시 / “코로나19 이후 생명과 자연에 대한 성찰”
- 3차 11월 9일(월) 오후 6시 / “코로나19와 한국사회 현상학”
- 4차 12월 14일(월) 오후 6시 / “코로나19시대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특별 프로그램) 1월 11일(월) 오후 6시 /

기사연 프로젝트 “코로나19 이후 사회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토론회

시즌 2)

- 5차 2월 8일(월) 오후 6시 / “언택트 사회 속에서 새로운 신앙을 묻다”
- 6차 3월 8일(월) 오후 6시 / “코로나19와 대안적 경제 - 생태적 순환경제로의 전환”
- 7차 4월 12일(월) 오후 6시 / “코로나19와 대안적 경제 -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 8차 5월 10일(월) 오후 6시 / “마무리 대토론”

크리스찬아카데미 - NCKK 공동기획 연속토론회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와 교회

시즌1) 4차 “코로나19시대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목 차

인사말	3
-----	---

발제	코로나19 시대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5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민주주의와 한국 교회 -한국교회 Reset을 위한 제언-	14
	정미현 (연세대학교)	

논찬	무슨 징조가 더 필요한가, 어떤 위험한 일을 더 보아야 하는가?	27
	오현선(공간엘리사벳)	
	한국교회와 코로나	32
	최순양 (협성대학교)	
	코로나19, 교회,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그림자	36
	한수현 (감신대학교)	

향후 일정	39
-------	----

발제

코로나19 시대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1. 코로나19 팬데믹과 공동체의 위기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한지는 아직 1년이 채 못되지만 그동안 인간의 삶과 공동체에 미친 영향과 변화는 엄청나며 놀랄만하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휩쓸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전반에 가져온 심대한 변화를 학자와 언론인 전문가들이 다방면으로 분석하며 예측하고 있지만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세계질서의 재편이라든가 언택트(untact) 사회와 뉴 노멀 문화의 보편화, 디지털 문명과 포노 사피엔스로의 진화 등 전조와 징후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과연 포스트 코로나의 세계가 그리로 갈지, 혹 그 정도의 변화로 그칠 것 인지는 장담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얼마만큼의 인명 손상과 피해를 입힐 것인지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백신과 치료제가 발명이 되고 집단 면역이 이뤄지면 감염병은 소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과 감염의 속도를 백신 개발이 따라잡기 힘들다는 의학계의 고백을 듣고 보면 그런 기대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화이자 회사가 만들었다는 백신도 안심하기엔 너무 이르며 인공 백신이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 항체를 만들어 준다는 보장도 없다. 우선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운반해야 변질하지 않는다고 하니 안전하게 수송하고 보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요원한 일 같다. RNA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든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백신이 개발되어도 맞지 않겠다는 사람이 미국에서만 35%라고 한다.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로 코로나19가 종식되리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이덕환 교수는 주장한다.¹⁾

자연과학자 김명자 교수는 역사적인 팬데믹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와 연관되었다며 유럽에서 5년간 3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페스트도 소빙하기(little ice age)로 바뀐 기후변화로 인한 흉년과

1) 이덕환, “코로나19의 과학과 인포데믹”, 「철학과 현실」, 126호, 2020 가을 호, 190p

기근, 냉해 등에 연관된 대재앙이었다고 풀이했다.

1918년 스페인 독감도 그 이전 3년간 이상 저온 현상에 기온의 하강으로 인체의 면역이 약해진 가운데 번식력이 왕성한 쥐 등 매개체가 기승을 부리고, 1차 대전 후 부상을 입은 병사들의 귀환이 바이러스 전파를 가속시켜 일어난 팬데믹이었다고 한다.²⁾

성서에 기록된 3500년 전 이집트의 10대 재왕과 모세의 기적도 파리와 메뚜기;의 범람, 가축의 괴질과 폐죽음, 흉작과 기근, 역병이 결합해서 일어난 팬데믹으로 바이러스가 젓먹이 아이들을 죽인 대재앙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고대 로마 문명의 종말이 천연두나 홍역으로 추정되는 역병의 발생으로 지중해 무역이 쇠퇴하며 일어났고, 중세 유럽의 페스트는 인구의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뒤에야 죽음에 대항하는 쾌락과 인도주의를 소생시켜 르네상스 같은 문명의 꽃을 피웠다는 역사를 읽게 되면 팬데믹이 한시대의 문명을 종식시키는 위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시적 유행병으로 그치지 않고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인류 공동체에 더 심각한 피해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미 2003년에 유행한 사스(SARS) 바이러스와 2013년에 유행한 메르스(MERS)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모두 7가지가 밝혀졌는데, 감기를 일으키는 4가지 변종이 있고, 폐렴을 일으키는 2가지 변종이 있었는데, 그것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와 중증호흡기 증후군(MERS)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번째 변종 코로나라고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유전적 일치율은 79.5%였고, 메르스 바이러스와의 일치율은 50%라고 한다., 그래서 SARS-CoV-2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것이다.⁴⁾ 코로나 25, 코로나 30의 팬데믹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세포 친화력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의 하부 대신 상부 호흡기관(구강, 인후, 기관지 상부)에서도 증식하기 때문에 기침만 해도 몸 밖으로 쉽게 튀어나와 전염력이 매우 강하며 속도도 빠르다. 동일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로는 감염 뒤 4일째에 바이러스 농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 시점에 인후 등에서 채취한 표본 한 개 당 바이러스 수는 7억 개였다고 한다. 2003년의 사스 때의 검출량이 50만인데 1천 배다 높아진 강도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 보다 변이가 빨라 인체에 들어가면 세포 안의 유전자 발현 과정에 끼어들어 자신의 유전체를 복제하고 복제된 유전체들이 새로운 바이러스 개체가 되어 숙주의 세포 밖으로 나가 새로운 숙주로 향해 전염을 일으킨다. 아직 더 많이 연구되고 검증되어야 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학의 힘으로도 쉽게 정복하기 어려운

2) 김명자, "기후변화와 팬데믹의 복합위기". 위의 책, 35p.

3) 김기봉, "포스트코로나 뉴노멀과 신문명 패러다임", 위의 책, 112p

4) 기모란, "바이러스 감염병이란 무엇인가?", 유네스코 아태 교육원, 『멀티플 팬데믹』, 이매진 2020, 22쪽

종자인 것 같다. 그래서 학자들은 코로나 이후(Post-corona)가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With-corona)가 맞는 답으로 보는 것 같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수 공통 바이러스로 원래 고양이나 낙타, 박쥐와 같은 포유동물과 조류가 숙주였는데 어떤 과정과 원인으로 인간에게 옮겨졌다. 옮겨진 원인과 과정이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며 사람들이 동물에 근접하게 되었고 기후변동이나 생태계 파괴가 바이러스를 증식, 전파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더 증식 변종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은 마스크와 거리두기로 온라인 수업과 예배, 재택근무, 해외여행 금지 정도 등의 불편함을 견디는 정도의 고통이지만, 한때 중국 우한이나, 북부 이탈리아, 미국 뉴욕처럼 도시가 완전 봉쇄(Lock down) 되고, 감염자와 사망자가 폭주해, 의료대란이 생기고, 범람한 시체를 냉동차에 실어 구덩이에 묻는 참담한 경지가 도처에서 오래 지속된다면 페스트나 스페인 독감에 못지않은 대재앙으로 인한 문명의 종말과 변환까지 예측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2. 공동체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과 철학의 딜레마

11월 15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의 숫자는 5천만 명을 돌파했다. 치명률은 세계 평균이 6%이고 한국이 2.3%이다. 전 세계 사망자 수는 나라마다 통계가 부정확하고 비공개 숫자도 많아 정확한 숫자는 밝혀지지 않지만 평균 치명률을 대입해 본다면 벌써 3백만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코로나19의 전염이 이런 추세로 여러 해 간다면 감염자나 사망자 숫자가 열 배가 될 수도 있는데 페스트에 버금가는 대재앙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성실한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 최악의 피해는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도 있지만, 백신 개발만이 팬데믹을 막아낸다는 보장도 없다.

지금 나라마다 경쟁적으로 백신 개발에 매달리고 있어 머지않아 개발에는 성공하리라 기대하지만 백신 개발이 코로나19 위기를 모두 해결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세계화로 인해 감염병은 전 세계 온 나라로 퍼져 있고, 모든 지역에서 백신이나 집단 면역으로 코로나 질병이 퇴치하기까지는 빨리 잡아도 2-3년이며, 변종 바이러스까지 나온다면 4-5여 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인명손실에 못지않은 심각한 타격은 경제와 시민 생활에서 일어난다. 사람사이의 전염을 차단키 위해 마스크 쓰기과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강력히 시행되는데, 결국은 대면 접촉과 방문, 여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역 규칙을 실시하게 된다. 상점과 식당, 학교와 회사가 문을 닫고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과 회의가 뉴노멀이 될 때 경제와 사회생활의 붕괴현상은 다양하며 심대하게 나타난다. 자영업자가 거리에 나왔고 대기업이 파산 직전에 몰리는 현상을 이미 보고 있다. 송호근 교수는 우리나라가 겪게 될 경제 위기를 이미 지난봄에 이렇게 내다보았다.

“파산 도미노는 항공, 자동차, 철강, 석유회사 등 한국경제의 주력부대를 훼손하고 월급생활자를 덮칠 예정이다. 비정규직과 일용노동자는 이미 타격을 받아 절망적이다. 외국 거대

기업, 생산과 소비시장, 금융이 비상상태로 돌입한 지금 시장력을 훼손하는 것은 다 폐기처분해야 한다. 돈을 살포해도 공장이 다시 돌지 의문이다. 생산과 소비의 세계적 위축은 내년에 더욱 치명적이 될 것이다”(조선일보 2020년 4월 10일자)

파산되는 기업과 실업을 막고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행정력을 강화하고 시장경제에 개입해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추고 연체금을 연장시키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임대주택 법도 마찬가지, 한쪽 편을 들면, 다른 쪽의 손해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다른 한편 경제 파탄과 대량실업을 막아 국민 경제생활도 유지시켜야 하는 정부는, 또한 국제협력도 민족적 이익도 지켜야 하는 국가는 서로 대립하며 모순되는 정책과 원칙 가운데서 딜레마에 빠지며 어디에 우선성을 두고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정책들과 대응책들은 서로 모순되는 가치관과 철학에 인도되어 떠도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 대체로 세 가지 차원에서 갈등과 대립을 관찰할 수 있다.

1) 첫째는 globalism과 nationalism의 갈등과 모순이다. 감염병의 침투와 확산을 막기 위한 일차적 조치는 우선 국가별, 지역별 봉쇄이며 여행과 출국의 금지이다.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되었을 때 전 세계가 취한 조치가 중국인 입국금지였으며 중국으로의 여행금지였다. 중국 안에서도 우한이나 후베이 성으로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반대로 중국의 코로나가 한국에도 전파되어 감염이 수 천명대로 확산되었을 때는 중국에서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시켰고, 심지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마저 내보내는 추방정책도 사용했다.

우선은 세계주의(globalism)를 포기하고, 내 나라, 내 도시를 보호해야겠다는 지역주의(regionalism)나 국가주의(nationalism)가 득세할 수밖에 없다. 국경의 봉쇄 같은 globalism의 포기는 당장 경제적 손실과 타격을 가져온다. 수출이 막히고 부품 수입이 안되어서 생산과정이 차질을 빚고 공장이 쉬게 되면 실업인구가 늘어난다. 그래서 다시 국경을 열고 출입국 제한을 풀었더니 전염병 확진자는 대폭 늘어나 정책의 모순과 딜레마가 불가피하게 된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생산, 조립, 가공,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이 글로벌 밸류 체인(global value chain)에 따라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봉쇄로 인해 연결망이 끊어지면 여러 가지 혼란과 위험 장애를 입게 된다.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부품 공급이 끊어져 자동차 생산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해외에 두었던 기업을 복귀시키는 re-shoring현상도 생김으로 자국 경제중심의 신 보호주의는 세계경제의 불균형과 역기능을 가져오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원인이 되는 생태계의 파괴를 막고 전염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긴밀한 국제협력과 globalism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하는데, 민족주의와 국수주의(chauvinism)의 득세는 갈등을 고조시켜 무역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백신 민족주의도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전 미국 국무장관 Henry Kissinger는 “corona 19 팬데믹이 세계화의 작동을 중지시켰다. 자유 질서의 시대는 가고 과거의 성곽도시(wall city)의 시대가 도래하는 시대착오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다.⁵⁾ 글로벌리즘이 완전히 무시되고 각자도생의 국가주의나 지역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게되면 중세의 성곽도시 안에 갇혀 사는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

2) 둘째는 개인의 자유와 전체의 안전 사이의 갈등과 충돌인데, 이것은 자유주의(liberalism)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혹은 권위주의(authoritarianism)의 갈등과 모순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취한 우선적 조치는 안전 규칙을 만들어 지키도록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이었다.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로 지키도록 하려면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며 빼앗는 일은 국가와 정부의 불가피한 과제가 된다. 식당과 카페의 출입을 막고, 교회의 예배 참석도 제한하며 결혼식과 장례식도 10명 이내만 모일 수 있게 될 때 사람들은 상당한 속도로 이동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느끼게 된다. 이 정도를 넘어 여행의 자유가 막히고 생존수단인 영업장 오픈이 제한될 때엔 심각한 생존권의 박탈까지 경험하게 된다. 지난 봄 이태리에서는 집에만 갇혀있고 문밖을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식료품을 사거나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집 밖을 나올 때도 경찰의 허가증을 받아야 했다.

독일에 있던 아들이 귀국해서 15일간 격리 생활을 했는데, 몇 시간에 한 번씩 핸드폰이 울러 소재지를 파악했다. 심지어 집에서 전화를 받는지 밖에 나가서 받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침대에 앉은 자기 모습을 사진 찍어 실시간에 보내도록 강요했다. 조지 오웰의 1984년에 실린 빅브라더(big brother)가 한국에도 와있구나 하는 느낌이었다. 스마트폰의 QR 등록으로 내 신체의 내부까지 감시망 속에 들어가는 감시체계의 디지털화와 완벽화가 점차 실현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19 감염이 위기 상황에 이르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하든가 아니면 전체주의적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했다. 한국은 유교문화의 잔재 때문인지, 권위주의 독재국가의 경험 때문인지,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른 것인지 평가는 다르지만 비교적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의 규칙들을 잘 지킴으로 성공한 나라로 인정 받고 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처럼 수 만명의 확진자가 생겨, 국가의 통제나 감시가 도를 넘을 경우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집합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독일 베를린에서 수만 명이 봉쇄 조치에 저항하는 데모를 연속하는 것을 보면 가치관의 갈등과 정책의 대립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민주시민의식이 성숙지 못하면 파시즘이나 전체주의 권위주의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게 된다. 만약 전체주의적 명령이 코로나 위기를 타고 되살아난다면 흡스의 리바이턴이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있다.

3) 셋째로 모든 나라들이 겪게 되는 갈등과 딜레마는 방역대책과 경제 정책 사이에서 일어난다. 방역을 위한 봉쇄 조치와 영업제한은 필요하지만 장기화 될 경우 국민경제와 서민생활은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고 거리두기나 영업제한을 풀었더니 감염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됐다.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나 마찬가지 현상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소비 쿠폰을 발행했다가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다시 봉쇄 조치를 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게

5) 김기봉, 위의 책, 112p

되는 모순된 정책을 왔다갔다하는 정부 정책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위기를 장하준 교수는 ‘준전시 상태’라고 표현하면서 만약 백신이 빨리 개발되지 않아서 경제 마비가 계속된다면 1929년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⁶⁾ 오일쇼크나 금융위기 정도가 아니라 수요, 공급, 소비가 한 번에 붕괴되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심한 타격을 입는 업종이 대면 사업을 해야 하는 서비스 업종과 관광 산업 분야다. 선진국 일수록 서비스 산업이 확장되어 있으므로 실업률이 30%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5월 현재 실업인구가 22%라고 한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실업자만 3천만 명이다.

실업대란과 경제공황을 막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임금 생활자들에게 80%까지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액의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불황이 심해지면 국고를 털어서라도 국민경제생활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경제발전과 생태계 보존이 모순관계에 있듯이, 국민들의 경제 안정과 건강 유지가 모순관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조정하며 균형을 유지하는가가 중요한 판단이 된다. 경제나 생명이나 철학과 가치관에 따른 결정을 해야 한다.

3. 지속가능한 文明과 교회의 사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세계라는 주장이 학자와 전문가들의 보편적 인식이다. 설사 백신과 치료제의 발명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해도, 변종 바이러스는 새로운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고 수년씩 걸리는 백신의 ‘생산과 보급’은 뒷북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21세기에 들어와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을 볼 때 발생 주기가 더 짧아질 수 있다고 최재천 교수는 염려한다.⁷⁾ 발생의 원인인 생태계 파괴나 기후변동, 동물 서식지 침범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학자나 지식인들은 코로나19가 일으키는 세계와 문명의 변화가 14세기 페스트에 못지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흑사병 이후 유럽이 새로운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탄생시켰듯이 지금까지 세계와 문명을 떠받치던 자본주의의 구조가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문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홍기빈 박사는 보고 있다.⁸⁾

코로나 빅뱅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충격과 변화는 문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만큼 거대한 것이었다. 언택트(untact)비대면 사회의 문화는 산업구조와 생활구조를 변화시켰고, 국가와 시민사회, 학원과 종교 속에서의 인간관계와 권력관계를 변화시켰다. 많은 비정상과 비상식이 뉴노말이 되는 과정이었다.

6) 장하준 외, 『코로나 사피엔스』, 문명의 대전환, 인플루엔셜 2020, 51p

7) 위의 책, 20-25p

8) 위의 책, 16p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의 새로운 문명이 어떻게 탄생되고 전환될 것인지는 아직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래는 갑자기 오지 않고, 반드시 신호를 주고 온다”라는 미래학자 최윤식이 지적했듯이, 인간은 미래의 징조를 예감할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다.⁹⁾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보존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명은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 지속 가능한 국가 사회제도, 지속 가능한 생태계와 지구환경의 조건을 만들어야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공동체의 위기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문명을 꿈꾸며 낡은 문명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나타난 징조와 위험 신호를 보면서 책임 사회를 선포한 세계교회의 사명과 과제를 찾아볼 수 있다.

1)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야기한 공동체의 위기, 대면 집회 금지, 국가 간 도시 간 봉쇄(lock down)와 단절에서 활로를 열어준 공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디지털 문화에 있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한 SNS 시스템이 없었다면 격리와 봉쇄 속에서 공동체의 삶이 지속 가능했을까? 우리나라가 K-방역을 성공시킨 것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율적 참여의 덕이라지만 디지털 통신의 발전이 밑받침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들을 찾아내 격리시킨 질병관리본부는 전 국민이 스마트 폰을 들고 포노 사피엔스(phono saience)로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⁰⁾

이런 추세는 불가피하지만 성찰해야 할 문제도 있다.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어 세계가 점점 거대한 컴퓨터처럼 변해가고, 인간의 정체성마저 포노 사피엔스로, 혹은 코로나 사피엔스(corona sapience)로 진화한다면 인간의 고유한 정신과 자율성, 기계로 치환될 수 없는 정서와 의지의 영역은 어떻게 보존되며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철학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디지털 문명 시대에 인간의 주체적 삶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해야 할 철학과 신학, 인문학은 과학기술문명과 정신문화를 조화롭게 결합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과 인공지능, 비대면 온라인 초연결이 필수적 요건이 될 미래 사회에서 경제, 사회, 생태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면서도 윤리적인 디지털 문화를 창안하는 일이 철학과 신학의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2)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포스트 코로나의 위기는 세계 경제의 위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봉쇄와 단절, 여행과 교역의 제한으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막히고, 원자재와 상품의 거래가 원활치 못해 공장이 문을 닫으며, 폐업과 실업자가 늘어난다.

글로벌 벨류 체인(global value chain)에 따라 생산, 조립, 가공, 수출 등 국제적 분업체제로 연결되던 자본주의적 세계경제 구조는 큰 타격을 입는다. 세계화의 정지로 글로벌 가치 사슬이 무너지면 대량실업과 물가폭등,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 공황이 올 수 있는 위협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예측한다.

9) 최윤식, 『빅 체인지, 코로나19 이후 미래 시나리오』, 김영사, 2020, 16p.

10) 김기봉, “포스트코로나 뉴노멀과 신문명 패러다임”, 위의책, 129p

그렇다고 실패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대안이 될 수 없다. 생산, 소비, 유통, 무역, 고용, 복지 등 전 과정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생산과 과소비, 투기금융자본의 횡포를 막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무한 경쟁 속에서 야수와 같이 약육강식하던 야만적 자본주의를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전환시켜야 한다.

오바마 케어를 포기한 미국이 코로나 방역에 실패해 의료 후진국으로 전락한 불명예를 보면서 이제는 전 국민 의료 보험제를 실시해야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 다가올 대량 실업 시대에 국가의 책임이 될 고용 복지제나 기본소득제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열악한 노동환경의 저소득 빈곤층과 방치된 요양병원의 노인층에 감염병이 확대되는 것을 보면, 빈부격차와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지 않고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진다.

3)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을 막고 앞으로 오게 될 유사한 질병과 재난을 예방하는 지속 가능한 문명의 요체는 생태계의 온전한 보존과 파괴를 방지하는 데 있다.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 숲과 동식물 서식지의 파괴가 기후변화와 야생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켜 바이러스 팬데믹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이다.

물론 기후변동의 원인은 화산이나 지진, 태풍과 태양계의 변화에도 있어서 인간에게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50억 년이나 지탱해온 지구의 생명과 활동 리듬이 불과 1만 년 정도 지구에서 거주한 인간들에 의해 파괴되고, 특히 지난 2백 년 동안 산업화, 도시화로 최근의 세계화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착취되어 못쓰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들에게 있다고 유니온 신학교의 라스무스 교수가 주장했다.¹¹⁾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 지구윤리를 주장한 라스무스 교수는 지구의 생명을 지켜야 인간의 생명도 지킬 수 있다며 WCC가 「생명의 신학」(Theology of life)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¹²⁾

인간의 욕망에 따라 생태계를 파괴하고 동식물을 멸종시켜 생물 다양성이 사라진다면 지구촌의 지속 가능한 문명은 2050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경고도 있다. 쓰다 버린 마스크와 플라스틱이 바닷물고기의 뱃속에 쌓이고, 처리 못한 쓰레기 더미가 농어촌을 잠식하며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도심지의 가시거리를 좁히는 오늘의 세계문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모르겠다.

자본주의 소비경제가 주도하는 현대문명이 생태계의 파괴와 함께 문명의 붕괴 위기를 일으킨다는 연구와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코로나19의 위기로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생태계를 살리고 생명문화를 보존키위해 인간의 삶의 구조와 경제제도, 사회조직 등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생태론적 문명론(ecological civilization)이나 생태론적 신학(ecological thely)이 발전되어야 한다.

11) Larry L. Rasmussen, Earth Community, Earth ethics. Newyork orbis books, 1996, 25p

12) 이삼열, 『생명의 신학과 윤리』, 숭실대기독교사회연구소, 1997, 17p

이러한 문명의 위기에 직면한 교회가 오늘날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과 책임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복음에 따라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증거하고 실천해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와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야 할 기회의 시대에 과연 무엇을 해야 하며 할 수 있는가?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예배를 성대하게 드리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사회봉사나 사회선교를 등한시 해온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철저한 자기비판과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당 문이 닫히고 주일 낮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허락된 통제와 감시는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학교도 직장도 모든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비상시국의 고통이었다. 그런데 “예배가 생명보다 중요하다”, “종교의 자유를 국가도 침해 못한다.”라며 대면 예배와 집회를 강행한 목사님들은 순교자임을 자처했지만,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방역에 거침돌이 되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예배의식과 제도 교회의 유지보다 인간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깨닫지 못한 처사였다.

교회당에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상시엔 숲속이나 땅굴 속에서 기도하며, 박해 시엔 로마의 카타콤 속에서도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앞으로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어 대면집회가 오랫동안 불가능해지면, 온라인 예배와 성경공부, 카톡 화면을 통한 심방과 상담, 줌을 통한 구역예배나 그룹 활동이 교회의 뉴노멀이 될 수 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다. 예배를 통해 깨달은 교인들이 사회와 세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빛과 소금의 직책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믿음과 실천의 공동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투로 수천만의 감염자와 수백만의 사망자가 늘어나고 경제와 사회 생태계가 붕괴되며 글로벌 문명이 위기에 처한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문명을 이룩하는데 기여할지를 깊이 성찰하며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의 교회와 신학이 이러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시들어가는 종교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발제

민주주의와 한국 교회

-한국교회 Reset을 위한 제언-

정미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I. 들어가는 말

분단 70년이 가져온 이념 갈등,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반목과 대립을 조금도 완화하지 못하고, 휴전선언을 종전선언으로 바꾸어 내지도 못한 채 2020년이 저물어 가는 이즈음 우리는 민주주의와 교회라는 거대담론에 대해 생각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코로나 이후 정치철학적으로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더 나아가 국가권력의 강화를 어느 정도까지 수행하느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방역을 위한 국가통제 시스템 앞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쉽게 무력화되었다. 국가권력이 극대화되는 상황 앞에서 보건 정책과 방역을 둘러싸고 국가와 교회 운영 사이에 많은 갈등과 마찰이 있었고, 우리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성 문제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교회 공동체와 국가의 관계설정의 문제를 역사적 맥락에서 간략하게 고찰하고, 특별히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시대를 조금 더 세밀히 들여다보며, 개혁전통의 재적용 문제를 통하여 개혁정신을 되살려 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나 교회의 운영체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신학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즉 기독교의 흐름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민주주의의 실천의 장으로써 한국교회리셋을 위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하는 것이다.

II. 몸말

1. 기독교와 민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의 근거는 예수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겠다. 예수의 운동은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실과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주변부와 가장 밑바닥에 오신 하나님 자신의 운동이었으며, 주변화된 이들과 고난당하는 이들과의 연대와 결함을 통하여 로마 제국에서 이루어진 거짓 평화(Pax Romana)와는 다른 통전적 평화(Shalom)를 제시하는 길이었다. 로

마의 평화에 맞서 사랑의 길을 알려주신 예수는 제국의 질서를 거부하지 않았으나, 그 안에 함몰되지도 않았다. 예수는 국가 질서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부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젤롯당과 입장을 달리했지만, 로마제국 황제에 의한 외적 질서와 하나님에 의한 인간의 내적 영역으로의 이분법적 분리도 배제하였다. (막 12:13-17; 마 22:15-22; 눅 20:20-26)

예수가 제시한 방법은 클라우스 벵스트가 표현한 것처럼 “변두리적 실존을 찬양하거나 ‘변두리적 실존’을 ‘보다 좋은 인간’으로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힘 속에서 변두리와 중앙의 분리를 폐지하고, 새로운 창조가 도래하도록 하며, 예수의 죽음을 중앙과 변두리를 분리하는 구조들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로 확정하기 위함”¹⁾ 인 것이다. 그 예수의 정신은 초대교회 세례 선언문인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잘 드러나 있다고 본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갈 3:28)

오순절의 성령 체험으로(사행 1-2) 태동한 초대교회는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화와 테오도시우스 1세의 기독교 국교회 이후 로마제국의 지배 종교로 자리매김되었다. 로마의 법을 정돈하는데 기독교는 라틴화되어 제국주의에 응답하였고, 그 근간을 이루는 토대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립한 기독교적 국가관이였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기독교에 의해서 기독교와 국가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교리체계가 완성되었으며, 중세기까지 교회의 권위는 국가 지도자의 권력 우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놓기 위한 종교개혁의 시도는 이후 교회의 지형도 뿐 아니라,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도 점차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는 사회 전반에 사상적,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근대 서구 유럽의 법체계와 민주주의의 토대를 놓은 사람으로 우리는 장 자크 루소를 기억한다. 그러나 그의 반종교적 성향 때문에 그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장 칼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루소는 그의 대표작 『사회계약론』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칼뱅을 신학자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가 타고난 재능의 넓이를 잘 모른다. 그가 크게 기여한 우리나라 [제네바]의 현명한 여러 법령의 편찬은 그의 《기독교강요》 못지않게 그에게 명예를 부여한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우리의 신앙에 어떤 혁명이 일어나더라도, 조국과 자유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위인의 기억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축복의 대상이 될 것이다.”²⁾

인민주권, 삼권분립 등 미국 민주주의 핵심사상의 토대를 놓은 미합중국 헌법의 권리장전(1791)도 칼뱅주의 신학자들과 법학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것들임을 볼 때 루소의 이러한 표현은 지나

1) 클라우스 벵스트/정지련 옮김, 『로마의 평화. 예수와 초대 그리스도교의 평화 인식과 경험』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4), 301.
2) 장 자크 루소/최석기 옮김, 『인간불평등기원론/사회계약론/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서울: 동서문화사, 2016), 209.

친 것이 아닐 듯하다. 칼뱅의 영향은 비단 유럽대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구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법사학자 존 위티 주니어는 종교개혁 이후 칼뱅과 칼뱅주의 전통이 ‘인간의 권리’에 대한 법제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갔음을 강조한다. 그는 유럽과 북미의 기초 사상인 시민의 정치적 권리, 연방주의, 평등주의와 사회계약론 등이 칼뱅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칼뱅주의자들의 신학과 정치학의 개혁에 기인했다고 본다.³⁾

칼뱅주의 신학자이자 정치가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제네바에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잉글랜드로, 그리고 미국으로 이어지는 자유와 민주에 끼친 칼뱅주의의 영향력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자유 나무를 [키운] 칼뱅주의 원칙들에 대해 역사적인 연구”⁴⁾를 열정적으로 주장했던 것이다.

칼뱅의 사상이 이처럼 유럽과 미국의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직, 간접으로 공헌한 것을 보아야 하지만, 아울러 칼뱅과 칼뱅주의자들에 의해 벌어진 그늘진 측면과 불편한 진실, 예를 들면 유럽과 북미, 아프리카 여러곳에서 가시화된 인종차별주의, 노예제도의 연관성 등의 역사적 사실들도 있기 때문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종교개혁자들을 이상화하거나 폄훼하는 그 어떤 해석에서도 성급한 단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보다 다면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자유주의의 중요 가치 중 하나를 민주주의와 종교적 관용이라고 할 때 종교개혁은 비관용과 통제, 재세례파를 비롯한 소종파 운동은 관용과 자유를 말한 것으로 단순히 이원화해서 보게 되는 한계가 있다. 종교개혁의 유형과 16세기의 역사적 정황이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서술이 필요하다. 그 칼뱅이 사회적 법제화를 통해 민법과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기 이전에 이미 그러한 시도를 한 사람은 칼뱅의 신학적 사상에 영향을 끼친 홀드리히 츠빙글리였다.⁵⁾ 한국 개신교의 2/3 정도가 장로교이며, 장로를 세울 필요가 없는 그 외 교단들조차 이러한 장로교 직제의 영향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의 뿌리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제한된 지면이라 상술이 어려워 거친 면이 있지만, 필자의 견해는 무엇보다도 스위스 종교개혁 시대에 재세례파를 비롯하여 급진적 개혁주의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의 처형문제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와 도시 정부의 관계성의 문제, 법령 위반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언급해야 한다.⁶⁾ 이들의 종교개혁적 사상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평가는 일차원적, 선형적으로 보기보다는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⁷⁾

3) 존 위티 주니어 지음/ 정두메 옮김, 『권리와 자유의 역사』 (서울: IVP, 2015).
 4)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1898), repr. ed.(Grand Rapids, 1981), 194-195. 존 위티 주니어 지음/ 정두메 옮김, 『권리와 자유의 역사』 (서울: IVP, 2015), 521에서 재인용.
 5) 미카엘 세르베투스나 재세례파의 처형을 칼뱅과 츠빙글리의 직접적인 죄과로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주로 스테판 츠바이크류의 소설에 의거하여 종교개혁자의 삶과 사역을 폄훼하는 사람들에게는 츠빙글리와 칼뱅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목일 수 있겠다.
 6) 페터 오피츠/정미현 옮김, 『올리히 츠빙글리. 개혁교회의 예언자, 이단자, 선구자』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 출판 문화원, 2017), 57.
 7) 노명식은 종교개혁과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직접적 연관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급진주의 좌파 종교개혁과 소종파 운동과의 연관성만을 이야기한다. 필자는 이러한 접근법이 오히려 종교개혁의 다각적인 면모를 이해하는데 저해가 된다고 본다. 노명식, 『자유주의의 역사』(서울: 책과 함께, 2015), 116-125.

특히 유아세례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촉발된 츠빙글리와 재세례파의 논쟁은 독일어권 유럽 안에서 국가교회(Landeskirche)와 자유주의 교회(Freikirche)의 구분을 가져오게 하였다. 관료제적 종교개혁과 비관료제적 종교개혁의 산물이다. 츠빙글리는 교회 공동체가 사회 안에서 섬과 같이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교회는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성 안에서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였다. 츠빙글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또한 외연적(external)이다”⁸⁾라는 것을 매우 중시하면서 강조하였다. 기독교 신앙이 내세주의로 빠지거나, 수도원적 영성에 젖어있지 않도록 경계했던 것이다. 따라서 츠빙글리는 교회가 취리히 도시 정부 안에서 시민 공동체이자 교회 공동체로 자리 잡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츠빙글리는 개인주의적 신앙의 관점에서 종교개혁을 촉구한 루터의 칭의론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며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사상에 의거하여 교회 개혁이 사회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시도했다. 개혁의 속도와 내용의 급진성을 주장한 재세례파의 정치권력으로부터 철저한 분리와 독립 의지에 츠빙글리는 뜻을 같이하지 않았다. 츠빙글리는 정치 질서를 존중하되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닌 비판적 연대를 시도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인은 충실하고 훌륭한 시민이며 기독교인의 도시란 기독교 교회와 다를 바 없다.”⁹⁾라는 츠빙글리의 유명한 진술은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교회와 국가 간의 비판적 협력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그의 종교개혁적 이상은 16세기 당시의 정치 사회적 정황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기 어려웠던 한계가 있다. 30년 전쟁 이후에 유럽은 베스트팔렌 조약 체제에서 통치자가 그 지역의 종교를 결정하는 “그의 왕국에 그의 종교(cuius regio eius religio)”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로써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의 지리적 경계는 유럽 안에서 더욱 뚜렷이 구분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방식을 통하여 시민들은 교파에 의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되었다.¹⁰⁾

기독교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이어가는 이상적 기독교 국가를 구상했던 츠빙글리의 계승자 하인리히 불링거는 개혁주의 전통의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인 2차 스위스 신앙고백문(Confessio Helvetica posterior 1562)에서 국가와 그 치안관료 체제란 인류의 평화와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관리되는 이상적인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한다.¹¹⁾ 스위스 재세례파의 전통이 철저한 정교 분리의 원칙에서 취리히 도시 정부의 질서를 거부했던 반면에 츠빙글리의 사상은 바울의 로마서 13장의 맥락에서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무조건적 굴종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의 빛에서 시민적 저항의식을 통한 상호 견제의 균형을 이루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세기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독일 나치주의의 국가 권력에 항거한 바 있으며, 이것은 이후 이어지는 고백주의적 개혁정신(status confessionis)의 원형으로 남게 되었다.

바르트는 하나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다루는 바르멘 선언문 5항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전적인 일치, 혹은 분리나 혼종 불가성(hybrid sterility)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관계성은 오히려

8) Huldreich Zwingli, “An Ambrosius Blarer, 4.5.1528,” Huldreich Zwinglis sämtliche Werke. Edited by Emil Egli et al. (Leipzig: Heinsius, 1925), vol. IX, 454. 14.
 9) Huldreich Zwingli, “Complanationis Jeremiae(1531),” Huldreich Zwinglis sämtliche Werke, Edited by Emil Egli et al. (Zürich: Berichthaus, 1959), vol. XIV, 424. 20-21.
 10) 단일화 된 종교체계는 기독교 공동체가 유럽에 자리매김하기 이전부터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
 11) 요아힘 로게, 『종교개혁 초기 청년 루터 청년 츠빙글리』 (천안: 호서대학교 출판부, 2015), 464-466.

상호 교정과 비판적 연대를 위한 보완적 작용을 하는 것일 수 있겠다.

“...우리는 국가가 그 맡은 특별한 임무를 넘어서 인간 생활의 유일한 질서이며 질서의 전부가 되어야 하고 또한 교회의 목적까지 성취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한다. 우리는 또한 교회가 그 맡은 임무를 넘어서 국가가 하는 식으로 국가적인 과업을 수행하며 국가적인 권위를 소유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한 기관이 되어야 하며 될 수 있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한다.”¹²⁾

흔히 교회의 사회참여를 말할 때 교회가 국가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설교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실제로 민주화 운동을 위한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는 설교에서 정치적 비판을 담은 직접적인 언급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르트의 경우에 그는 설교 강단을 정치적 성향과 견해를 피력하는 강연의 기회로 삼지 않았고, 나치즘의 등장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초지일관 하나님 말씀의 주석(exegese)¹³⁾을 주장하였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정치적 선전을 위한 장소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 말씀을 품은 개별적인 기독교인들이 제자직을 향한 소명을 다짐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는 교회 공동체는 설교가 정치적이기를 원하고 요구한다. 교회 공동체는 그 설교를 정치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정치’라는 단어를 결코 사용하지 않더라도 말씀의 선포는 정치적으로 이해될 것이다.”¹⁴⁾

바르트의 설교는 정치적 이념선전이 아니었음에도 시민 불복종과 정치적 비판력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힘을 지녔었다. 바르트는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서 1930년대 독일 나치즘이 등장했던 그의 시대 저항의 힘을 소생시켰으며, 이후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개혁주의적 저항 정신을 따랐다. 이와 같은 종류의 유산은 개혁신앙의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들에서 그 예를 살펴 볼 수 있겠다.¹⁵⁾ 1953년 한국 기독교 장로교 교회의 선언문, 198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벨 하르 고백문, 그리고 2004년 세계 개혁 교회연맹의 아크라 고백문 등이 개혁교회 공동체 안에서 손꼽을 수 있는 중요한 문서들이다. 이러한 문서는 시대 상황에 따른 통전적인 사회참여적 신앙인의 영성을 고백으로 풀어낸 것이며, 교회가 예언자적 정신을 회복하고자하는 외침이었던 것이다.

한편 츠빙글리의 동료이자, 제자들에 의하여 비롯된 재세레파와 개혁교회 안에서의 대립 구도는 20세기에 와서야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세계개혁교회 성례 공동체연맹(전

12) 김영재 편, 『기독교신앙고백-사도신경에서 로잔협약까지』 (서울: 영음사, 2015), 811-812.

13) 바르트가 히틀러에 대한 선서를 거부하고 본 대학을 떠나며 독일의 학생들에게 고별인사를 하면서 했던 말이다. “내 마지막 충고는 주석하라, 주석하라, 그리고 또 주석하라” Karl Barth, “Das Evangelium in der Gegenwart,” ThExh 25,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35), 17.

14) Karl Barth, *Christengemeinde und Bürgergemeinde* (Zürich:TVZ, 1989), 49.

15) Church, State and Citizen: Christian approaches to political engagement. Edited by Sandra F Joirem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Religious Voices in Public Places. Edited by Nigel Biggar and Linda Hog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세계개혁교회협의회)은 1989년부터 메노나이트 교회들과 화해와 협력의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취리히시와 스위스 개혁교회는 2004년 이들 재세례파와의 화해의 시도를 하면서, 기념비를 마련하고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면서 죄책 고백을 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위스 개혁교회와 세계개혁교회 성례공동체연맹을 중심으로 메노나이트 재세례파와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유형의 개혁주의의 후손들 모두 역사적 정황, 사회 안에서의 증언과 행동양상에서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에서 신앙고백을 중시하는 것, 평화주의 원칙, 정치 권력과 야합하지 않고 예언자적 정신을 유지하는 것 등에서 함께 비판적 연대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원칙을 천명한다. 이 헌법 조항은 특정 종교의 독점화 현상을 막고 3.1 정신에 드러난 바와 같이 종교의 다양성과 관용을 드러내고 무분별한 종교의 정치 개입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런데 정교분리의 원칙은 일제 식민지 시대 선교사의 가르침에서도 드러난 바 있으며 제국주의적 저항의식을 키워내지 못하게 하며, 체제 순응적 태도를 양산하고 기독교를 내세주의에 빠지게 한 역기능도 지니고 있다. 한국 교회 전반의 개인주의적 구원관과 정교분리의 원칙의 강조는 이후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소수의 신학자들과 교회들만이 기독교의 사회 참여 운동에 동참하게 만들었다. 반공-용공 프레임과 국가 조찬기도회로 상징되는 이익 집단과 권력 지향적 정치 세력과 결탁한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성은 오늘날까지 양상을 달리하며 이어지고 있다.

2. 한국교회를 위한 제언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기독인 대학생들과 일반 대학생들의 의식 성향을 조사한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는 조사에 따르면 기독인 학생들의 인식은 일반 교계의 인식의 틀을 반영하며, 일반 대학생들의 현상은 사회 전반의 인식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캠퍼스의 상황이 한국 기독교의 축소판이 되어 버렸고, 기독교는 사회를 선도하는 예언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레위기 법에 포로가 되어 있는 듯 하다. 2020년 코로나 정국에서 디트리히 본헤퍼를 남용하며 광화문 광장의 시위를 주도하고 정치 세력화된 한국 개신교의 양상은 한국 교회 사회 참여 양상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 탄핵 과정과 그 이후 촛불과 태극기, 서초동과 광화문의 이분법적 양상은 또 다른 형태의 광장 민주주의의 민낯을 드러내며, 사안에 따른 우리 사회의 갈등의 수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관리하고 사회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 민주주의의 확산과 교회 운영체제와 교육 내용의 개선으로 합리적 토론 문화를 개선하여야 하며 갈등 조정 능력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내 민주주의부터 확산해야 하겠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교회가 닫힌 보수의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예언자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필자의 견해에서 생각하는 몇가지 제언을 담아 이 글을 마감하려고 한다.

공동체의 의사 소통과 주요 사안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은사의 다양성의 인정 측면에서, 교회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 내용의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이

념을 넘어서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화두인 생명중심의 문화 확산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 은사의 다양성의 인정

은사의 다양성의 인정(고전 7:7, 12:1, 9-11)은 젠더 정의를 향한 여성신학적 담론의 민주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한국 여성신학자협의회 초대회장인 박순경 교수의 표현대로 “여성신학은 신학이 남성지배 이데올로기로 둔갑하지 않도록 지켜보는 파수꾼의 눈이다.”¹⁶⁾ 여성신학은 가부장주의적 지배 체제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한시적인 이론이며 운동이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여성신학은 한반도와 민족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서구 여성신학과는 차별화되고 번역, 변안신학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¹⁷⁾ 그러나 여성신학적 성찰과 방법론은 2020년 현재 우리 교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동호인들의 게토화 현상 정도의 인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다.¹⁸⁾

초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정체성을 담아 세례 선언문으로 선택했던 바울의 보편적 가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실현되지 못했고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악화되었으며, 주류 교회 공동체는 유감스럽게도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듯하다. 슬로베니아의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이렇게 꼬집어 말한다.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구별이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의 행복한 인류 가족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특수한 정체성들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커다란 분할선이 있어 그 정체성들을 궁극적으로 의미 없게 만든다는 의미다.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구별이 없다.(...) 오직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의 적들이 있을 뿐이다!’ 아니면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 오직 해방을 위해 싸우는 자들과 그들의 반동적 적대자들, 민중과 민중의 적들이 있을 뿐이다.”¹⁹⁾

한국 사회 안에서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내는 불평등성에 대항하던 민중들의 노력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정착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 문민정부의 출범이 공식적 상징성을 지닌 시점으로 볼 수 있겠다. 같은 방법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된 것이 언제인가를 묻게 된다면 그 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지만, 여성안수의 허용 시점을 그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겠다.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가입 교단만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기독교 한국 루터회와 한국정교회에서는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구세군대한분영,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가

16) 박순경, “한국신학: 여성신학의 구원사적 의의와 과제,” 『통일신학의 여정』 (서울:한울, 1992), 356.

17) 정미현, 『또 하나의 여성신학 이야기』 (서울:한들 2007), 282-330.

18) 정미현, “교회를 위한 신학으로서의 여성신학” 『한국여성신학』 2020. 여름 91, 12-22.

19) 슬라보예 지젝/ 김성호 옮김, 『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희극으로』(서울: 창비, 2010), 93.

각각 그 적용 시점을 달리하고 있지만 허용하고 있다.²⁰⁾ 안수받은 여성 목회자의 비율은 여성 안수가 허용되는 모든 교단을 막론하고 전체 교역자 수 10% 미만이다. 더욱이 실제로 기관이 아니라 기성 교회에서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적은 것이다. 물론 여성 안수 법제화가 교회의 민주화의 지표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여성목사가 교회의 민주화를 100% 담보해 주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교회 내 기회 균등, 역할 분담과 임금 구조의 측면에서 여러 형태의 불평등의 현주소를 가늠하게 한다.²¹⁾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 교회 공동체에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구조와 재정, 권력의 분배문제가 여전히 성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한다. 물론 이것은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9년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 격차 수치는 약 32.4% 정도로, OECD 평균을 훨씬 웃돌며, 36개의 회원국 중 가장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²⁾ 또한 세계 경제 포럼(WEF)에서는 2020년 현재 한국의 여성 경제 참여 수준을 155개국 중 127위로 선정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 주었다.²³⁾

여성 지도력에 대한 인정은 교회 내 민주주의를 확산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것은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기 때문이다.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지 못하는 언어습관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남을 정죄하는 문화가 보편화되고, 다름을 다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단주의적 획일성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사회의 현주소이다. 공동체 의식과 집단주의는 분명히 다르다.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우리(Weness)”가 아니라 뜻없는 허구적 “우리”(우리 마누라, 우리 집, 우리 남편 등) 문화가 확산된 한국사회에서는 집단주의적 획일성을 지양하고 공동체적 연대를 지향하는 교회의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존의 잣대와 규범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의 모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서적 의미에서 은사와 특성의 다양성을 강조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를 통해 창조적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와같은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특정 성과 특정인에게 사회적 역할 규범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 본래 성서적 개념인 카리스마에 대한 오해가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²⁴⁾ 카리스마라는 것이 특정한 개인의 지도력 정도로 축소된 이해를 바로잡고 영웅주의식 당회장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어느 특정인에게 집중된 지도력 보다는 다양한 은사를 서로 인정하고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획일적이며 일차원적 접근이 아니라 성적 지

20) 한국 최초의 여성목사 안수는 1931년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파송 여성선교사들의 안수를 허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한국인 여성으로서는 전밀라, 명화웅 목사가 최초로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안수 받았다. 재건교회의 최덕지 목사가 1951년에 그 뒤를 이어 안수 받았다. 장로교 가운데에서는 1974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 처음으로 여성목사 안수 허용을 결의하였고 1977년 양정신 목사가 안수받았다. 1995년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서는 1996년 박진숙 목사가, 2001년 대한 성공회에서는 2001년 민병옥 사제가 각각 세워졌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가입교단은 아니지만 이후 2003년 예수교대한성결교회, 2004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2011년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2012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순복음측), 2013년 기독교한국침례회에서 여성목사 안수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21) 예를 들어 여성안수가 허용되지 않는 예장 합동의 경우 여성 사역자들의 교회 내 사역에 차별이 있을 뿐 아니라 사례비에서도 차별이 만연하다. 최승현. “예장합동 여성 사역자들, 역할 제한에 사례비 차별까지,”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94>(2020. 10. 30).

22) 김지환, “11월 7일 여전한 성별임금격차” <http://h2.khan.co.kr/202011070000001> (2020.10.30.)

23) http://www3.weforum.org/docs/WEF_GGGR_2020.pdf, 12.

24) 미로슬라브 볼프/백지운 옮김, 『일과 성령』 (서울:IVP, 2019), 178-181.

향성, 종교, 신체, 계층, 인종, 연령 등 교차성(intersectionality)에 대한 인정과 고려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제시된 할당제의 도입 없이는 끊임없이 소외되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을 듯 하다. 숫적 균형이 질적 내용을 대변한다는 보장을 꼭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생물학적 다양성 추구하고 변화가 적어도 가시화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또한 교회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성,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성인지 예산(gender sensitive budget)의 작성지침이 이미 2008년도 마련되고 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되었으나 교회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이러한 차원을 적용은 고사하고, 이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보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단별로 법제화를 통해 이러한 장치를 마련하는 시도도 필요하겠다.

나. 교육을 통한 개혁주의(Evangelisch) 패러다임 전환

개혁주의의 근본 원칙은 개혁된 교회는 없고, 개혁되어야만 하는 교회(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진보와 보수의 핵심은 성서 읽기와 해석학적 방법론으로 가름된다. 기존의 선형적 텍스트 읽기의 방법과 달리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하이퍼텍스트의 글 읽기는 개방성, 확장성 그리고 다선형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하이퍼텍스트가 보편화되면서 성서 읽기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 성서가 죽은 문자로써 절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 상황에 대한 컨텍스트를 이해하도록 돕는 성경해석법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독일어로 evangelisch란 뜻은 개혁주의를 뜻하는데 우리는 이를 복음주의라 부른다. 중세 가톨릭에 대응하는 개신교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던 이 표현은 성서 해석에 있어서 원어의 주석을 지향하고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정통주의의 산물인 교리에 얽매이는 “종이교황”을 섬기는 오류를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관련 사안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성서의 해석 문제와 관련된다. 1950년대 김재준의 퇴출을 둘러싼 성서 해석 논쟁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듯 여전히 성서 축자영감설과 성서 문자주의의 입장에서 교회 교육이 진행되고, 획일화된 해석이 확대 재생산 되는 것이 여전히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다.

“현재 근본주의적 개신교의 차별과 혐오는 교회교육 안에서의 인권 감수성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성서문자주의를 바탕으로 한 고정관념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사회의 인권의식을 후퇴시켜왔다. 인권 감수성이 충분히 반영된 교재를 통해 교육받은 신앙인은 성서의 맥락을 이해 하고, 성서문자주의를 넘어 성서 전체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21세기 경제구조의 불평등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그의 책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경제구조의 불평등을 야기한 삼원사회에 대해 설명한다. 지식과 도

2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18 한국교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57.
<http://www.kncc.or.kr/newsView/knc201811210002>(2020. 11. 11 접속).

덕적 규범을 제시하는 지배계급으로서의 사제, 질서와 안위를 책임지는 전사계급으로서의 귀족, 노동하는 평민계급으로서의 제 3신분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사제란 꼭 기독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콘스탄틴 이래로 제국주의적 종교로 자리잡은 기독교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기독교 사제/목사들이 끼친 영향사와 성서 해석의 주석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겠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념으로서 성서의 내용, 기독교 사상이 오용된 채 그대로 재생 반복 되는 것이다.

여성신학은 기존의 성서해석과 교리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사유를 통해 “의심의 해석학”을 도입해서 건설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인간의 성서 해석과 이념을 절대화, 이상화하는데 저항하면서 개혁주의 정신이 여성신학과의 조우를 통해 재해석 될 때, 교회와 사회개혁의 촉매제의 역할을 더욱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한국의 사회갈등비용은 OECD국가 평균을 훨씬 웃 돌며 이를 위하여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은 1인당 GDP 27%를 차지하는데 수년간 이러한 비용은 더 늘어감에 그것을 해소하는 노력은 미미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지니고 있다.²⁷⁾ 갈등은 언제, 어느 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민주주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²⁸⁾ 민주주의는 갈등의 음성화가 아니라, 법적 제도 안에서 자연스런 표출을 통해 해결을 유도하는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법제화, 운영체계가 개선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토론문화가 우선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갈등을 관리하고 사회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수가 항상 옳음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²⁹⁾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러한 민주주의적 장치를 운영하고 토론의 문화를 건강하게 확산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개혁교회는 지식의 민주화, 권력의 나눔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나, 실제로 지난 500여년 동안 제도화된 과정에서 초창기의 동력을 상실하고 중세 가톨릭교회가 보였던 문제성을 그대로 재현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개신교의 현상은 한국교회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문화적, 구조적 장치를 한국교회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즉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려면 교회 자체가 이러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연습을 하고 이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중심으로 볼 때 안수받은 500여명의 여성목사와 511명의 여성 장로가 있다. 2020년 기독교 장로회 105회 총회 총대 652명 가운데 여성의 수는 68명이었다.³⁰⁾ 예장 통합의 경우 2017년에 교인 중 57% 여성이지만 총대 비율은 1.1%인 문제성을 지적하며³¹⁾

26) 정미현, “개혁주의와 여성주의가 만날 때,” 『신학 춘추』 (2020.10.27.), 134호, 7.

27) 박준 외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제710호), 2009, 11.

28) 박준 외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제710호), 2009, 1.

29)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이 비록 올바른 기반 위에 서 있을지라도 부분적인 진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통설이 채우지 못한 것을 보완해주는 다른 생각은 그것이 아무리 많은 혼란을 불러오더라도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소수파의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정할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강희영 역, 『자유론』 (서울: 위너스 초이스, 2007), 56-57.

30) 선승희, “가나안 성도 눈으로 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40> (2020. 11.10 접속).

여성 총대 할당제를 결의했으나 헌법위원회에서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해석하였고 2020년에도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교회 운영 구조에는 특정 성비의 구성에서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성 장로가 숫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직제 구조에서 특정 연령, 특히 젊은이들의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로라는 직분이 어느 정도 사회에서 명망있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중년 남성에게만 허용되는 가부장적 사고와 구조에서 우리가 한 치도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과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 배제의 운영체제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개교회 구조부터 노회, 총회에 이르기까지 거의 없는 형편이며 이 점에서 한국교회는 진보, 보수를 떠나 크게 다르지 않다. 단힌 보수도 문제이지만, 단힌 진보, 진보 코스프레 하는 집단도 여러 차원에서 문제인데, 양쪽 모두 진정성있는 개혁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³²⁾

그러는 사이 공공성, 이타심, 공감능력 등의 단어들은 젊은이들에게 사치스럽게 들리게 되어 버렸고, 젊은이들의 궁극적 관심은 취업에 필요한 일들과 지극히 사소한 개인적 행복의 영역으로 축소해 버렸다. “이기적 유전자”는 사회 구조와 문화의 자연스런 산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주동했던 기독교학생들의 모임은 캠퍼스에서 그 흔적조차 역추적하기가 어렵게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현재 대학의 기독교 동아리들은 대체적으로 단힌 보수 교회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대학가의 현실이다.³³⁾

2020년 한국사회의 부동산 정책에서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의 위력을 드러냈고 비대면 사회의 학습환경과 업무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건물주 위에 콘텐츠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핵심인 성서를 접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근본적 변화가 없고, 여전히 인간 중심, 남성 중심, 교조화된 교리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소확행으로 대변되는 한국형 헤도니즘이 개인의 자유추구와 권리 주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공공성에 대한 관심은 점점 약화되어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현상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욱 확산되어서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장미족, 멀티 페르소나, 업글 인간을 추구하는 N포 세대의 고충과 의견을 교회 안에서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와 구조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현실에 부대껴 사느라고 민주화, 통일, 기후 변화등 거대담론을 기피하는 이들의 시각이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 안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와 장치가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와 상

31) 이용필, “[통합3] 교인 57%가 여성인데, 여성 총대는 1.1%.”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16> (2020.11.10. 접속).
32) 두크나이트, “진보적이지 않은 진보적 복음주의,”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20> (2020. 11.10 접속).
33) 예를 들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교사상, 크리스찬아카데미가 공동으로 설문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응답자의 42.1% 찬성, 38.2%는 반대의견을 나타냈고 교회에 열심인 교인들이 이 반대에 숫적인 우세였다고 한다. 이상철, “코로나19와 한국사회. 정치분야” 『기독교 사상』 742(2020.10)13; 국내 학부 대학생 650명을 대상으로 2020. 7.30-8.11 사이에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캠퍼스 사역 연구소에 의해 실행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반대학생 기준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 32.5%가 긍정, 15.8%가 부정했던 반면, 선교단체 소속 학생에게서는 11.7%가 찬성, 63.1%가 반대하는 결과를 드러냈다.

항적 신앙고백을 유도하지 못하고, 교리를 반복적으로 답습하게 하며 시각의 전환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종래의 교회 교육의 내용이 그냥 답습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높이를 맞춘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촉자 영감설 이외에도 성서 해석의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교육을 통해 보편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있다면 특정 법안의 입법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고 한국사회 복합갈등을 해소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201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국내 주요 3개 개신교단(기장/예장통합/기감)과 2개 선교단체(파이드온/한국어린이전도협회)의 여름성경학교 교재를 인권 측면에서 분석하여 한국교회의 인권감수성 교육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물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교재의 내용 선정과 구성, 제시 방식에 대하여 성별, 장애, 인종, 직업 등의 인권 기준을 잣대로 교회 교육이 인권친화적 감수성에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교회 교육이 공교육보다 인권교육을 구현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보며, 기독교 정신과 인권의 가치가 일치하고, 이러한 가치를 담은 성서를 토대로 교회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즉 한국 사회의 인권교육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변화가 필수적일 것이다.³⁴⁾ 기독교가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기초적 단위가 되며, 우리 사회에 환대와 포용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눈으로 성서를 읽도록 교육 내용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겠다.

다. 생명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가톨릭 교회가 지닌 교회의 보편성의 원칙이 작용하지 않는 개신교회의 일반적 문제성을 넘어서서 한국교회의 개교회 중심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한국 장로교 연합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 왔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개신교단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체의 기구마저도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주소이다.³⁵⁾ 종교간의 대화(interreligious dialogue)가 긴박하게 필요한 서구사회와는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가톨릭, 정교회, 개신교)³⁶⁾ 내부의 대화(inter-Christian dialogue), 개신교의 절대 다수인 장로교 내부의 대화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2020년 한국 사회에 부각된 수많은 화두가 있었다. 주택시장의 임대차 3법, 택배 노동자의 죽음과 같은 경제 불평등에 대한 것 뿐 아니라, 낙태죄, 동성애, 차별 금지법과 같이 교회와 국가 간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이견을 좁히도록 좀 더 섬세한 대화가 필요한 주제들도 있었다. 이처럼 종교적 죄 이해와 신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적 합의의 차원만이 아닌 별도의 신학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을 아우르는 논의의 장은 마련되지 않은 채 정제

3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18 한국교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54.
<http://www.kncc.or.kr/newsView/knc201811210002>(2020. 11. 11 접속).

35)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신정호 총회장)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법제정 반대를 위하여 2020년 총회에서 협력하였다. 즉 이러한 사안에 따른 연대감이 형성된다는 뜻이다.

36) 현재 작동하는 한국교회 이단 판정 기준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 한 예로 공신력있는 현대종교에서 교단결의 관련한 사이트에 로마 가톨릭은 이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http://www.hdjongkyo.co.kr/news/sub.html?section=42264&category=42268> (2020.11.20. 접속).

되지 않은 수많은 오염된 정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절제 없이 유포되었다. 그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대되었고, 교회는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갈등의 촉매제가 되어 버렸다. 또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의학적,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는 일부 교회들의 모습이 부각되면서 교회는 반지성적 단체인 것처럼 인식되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이념을 확인하는 작업을 되풀이하기 보다는, 서로를 이어줄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 그것을 확산해야 될 것인데, 그 핵심은 생명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이후 시대에 강조되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온 피조물의 상호 연관성이며 생명 중심사상이다. 그 점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며 공교회로서의 세계교회와의 연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질에는 일치, 표현에는 자유, 매사에는 사랑”이라는 에큐메니칼 원칙이 여기에 기본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러한 가운데 1950년대 세계교회협의회 가입을 둘러싼 한국 교회의 분열의 유산을 극복하고 세계교회 협의회의 정신에 대한 물이해를 교정하며, 에큐메니칼 정신의 근원적 의미를 진정성있게 이해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III. 나가는 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대면 예배 중단과 방역을 위한 국가주의의 등장에서 한국 교회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해야만 되었다. 한국 교회가 한국 근현대사에 끼쳤던 긍정적 영향력과 수많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을 둘러싸고 오늘날 교회와 종교를 빙자한 집단들의 역기능이 더 부각되면서 기독교가 사회의 짐처럼 전락한 현실은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향한 한국 교회의 성장 위주의 방향에서 멈춤의 시간을 통해 돌아서서 교회의 본질을 향한 진정한 되새김의 자리를 갖도록 촉구하고 있다.

교회의 과제는 하나님의 집(오이코스) 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림살이에 적합하게 공동선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인류공동체의 시스템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경험한 2020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대강절 참회의 시간이 돌아왔다. 그러한 죄책 고백과 방향전환의 시간이 허락된 이 시기에 우리는 어느 나라, 어느 회사에서 백신 개발이 먼저 될 것인가를 기다리기 보다는 편리함과 속도감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사랑과 포용보다는 혐오와 배제가 더 만연한 한국 사회와 전 세계적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한 인간성의 원형을 보여 주신 예수를 믿고 따르며 준비가 아니라 인간이 되기 위한 고민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라면 말이다. 개인의 자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생산과 소비 활동, 인간뿐 아니라 자연도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배려 등 적색구원에서 녹색구원의 총체적인 관점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임계점에 우리는 이르는 것이다.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는 것 자체에 대한 염려보다는 교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시기이다. 공동선을 향한 사회적 가치를 무시한 교회가 외면당할 것을 걱정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시간이 촉박하다!”³⁷⁾

37) C.F. v. 바이젠크/이정배역, 『시간이 촉박하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논찬

무슨 징조가 더 필요한가, 어떤 위험한 일을 더 보아야 하는가?

오현선

(공간엘리사벳 대표)

1. 이삼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위기 상황이 일시적이거나 유일회적 증세가 아니라는 것, 또한 바이러스와 감염병 등이 인류와 사회에 미친 손실과 영향에 대해 역사적 근거와 과학적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코로나 판데믹 위기에 대한 합리적 인식에 도움을 주었다. 동시에 이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각국의 정책방향들이 국가경제, 개인자유, 경제가치에 관한 생각차이에 근거하며 실행되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다. 그는 그 생각차이의 사이균형적 선택을 모색하면서 사회와 교회가 과제로 삼을 것을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4차 산업과 인공지능, 비대면 온라인 초연결이 필수적 요건이 될 미래 사회에서 경제, 사회, 생태계가 지속가능 할 효율적이면서도 윤리적인 디지털 문화를 창안하는 일이 철학과 신학의 중대한 과제가 될 것. 둘째로, 불필요한 생산과 과소비, 투기금융자본의 횡포를 막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무한 경쟁 속에서 야수와 같이 약육강식하던 야만적 자본주의를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전환시켜야 할 것, 셋째로 생태계를 살리고 생명문화를 보존키위해 인간의 삶의 구조와 경제제도, 사회조직 등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생태론적 문명론(ecological civilization)이나 생태론적 신학(ecological theology)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현 글로벌 초자본 무한경쟁 환경에서 특권을 가진 정치가, 경제인들의 담론장이 아닌 교회의 과제를 말하는 장에서 여전히 효율과 윤리, 불필요와 필요라는 개념을 말할 때에는 누구의 효율과 필요에 기준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논의되길 바란다. 교회의 변혁적 변화만이 이 설명의 언설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조정과 균형적 선택을 말하면서 민중해방적, 작은자(마 25장)를 살리는 하나님나라의 뜻에 따라 변화해 온 예를 찾아주길 바란다.

2. 정미현은 코로나 바이러스 판데믹 상황에서 보건과 방역을 두고 국가와 교회 사이의 관계가 종종 갈등 관계처럼 비친 쟁점들을 역사, 특히 개혁교회 전통에서 존재, 발전해 온 교회와 국가 관계를 통해 성찰하였다. 그리고 그 역사적 교훈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적용 가능한 신학적

대안을 제안하는 글을 썼다. 개혁신교회의 역사에서 사회, 혹은 국가와 교회의 견해차는 언제나 권력화된 종교지도자나 민중을 억압하는 제국 정치가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서 드러났던 기억을 회상하며 정미현은 이런 개혁신교회의 전통의 기반 위에 한국교회 민주주의 리셋을 위한 세 가지 내용을 제안하였다. 즉 다양한 계층과 영역에 속한 주체들의 은사를 경청하고 수용하는 일, 기독교 정신이 인권의 가치를 포함하고, 이러한 가치를 담은 성서 이해를 교회가 하는 인권교육의 방향으로 삼는 등의 개혁주의 교육에로의 전환, 그리고 개교회 중심주의로 팽창해 온 한국교회가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선택적이며 제한적인 생명보존을 우선시 해 온 행태반복을 그치고 온 피조물을 연결하는 생명중심사상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한국교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며 민주적 구조로의 변화를 위한 제언은 유의미하다. 정미현의 제언을 주의깊게 읽으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편협하고 배타적 기구인지를, 또한 근본주의적 성서해석에 머물러 초자본주의적 교회집단의 스피커가 되어 왔는지를, 그리하여 얼마나 기독교의 생명사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리셋의 주체가 여전히 희미하다. 현재 교회구조에서 새로운 리셋의 기술과 내용, 힘을 모을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존재할까에 대한 의심은 나의 남아있는 의심의 해석학이다. 리셋의 매뉴얼은 있으나 작동할 주체가 없다.

3. 두 사람의 발제는 한국교회가 아직도 살피볼 의지가 있는 한, 잃을 것 없는 현상유지적 성찰 거울이 될 만한 글이라 여겨진다. 교회가 이들의 조언을 들을 만한 귀가 있길 바란다. 한국교회는 이 글에 담긴 메시지를 몰라서 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실행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스스로 안전하게 갇혀있다. 이미, 예수가 죽었을 때, 수 많은 역병이 돌았을 때, 지혜자와 철학, 신학자들의 언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구 곳곳의 매일 죽는 생명들의 소리를 외면해 왔다. 이삼열은 말한다.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보존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명은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 지속 가능한 국가 사회제도, 지속 가능한 생태계와 지구환경의 조건을 만들어야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공동체의 위기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문명을 꿈꾸며 낡은 문명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나타난 징조와 위험 신호를 보면서 책임 사회를 선포한 세계교회의 사명과 과제를 찾아볼 수 있다.”

징조는 어디에도 있었고, 어느 때에도 나타났었고, 때죽음을 당하고 죽음에 다다른 위기의 생명들은 이미 차고 넘쳐났다. 징조가 덜 명확해서, 위기가 아직 충분한 위기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수많은 징조와 가혹한 위기를 교회는 외면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지도자와 그들이 만든 교회교리와 교회구조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아니, 적어도 이 논의에 합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선언들이 진정 가능해 지도록, 근원적 변혁(Radical Transformation)으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

4. 교회와 사회의 갈등 혹은 국가체제, 발제자들이 말한 공생적 생명, 인권, 윤리적 가치들과 충돌하는 교회의 입장은 이미 그럴 수 밖에 없는 ‘교회교리’와 ‘교회구조’의 협력에 근원한다. 예수죽음을 값싼 대속교리로 만들어 각종 범죄의 전시장처럼 모여드는 죄인들에게 죄를 딜리트(delete)

해주는 자동장치화된 십자가 대속교리는 교회가 만든 최적화된 자본상품이다. 제대로된 기독교라면, 누군가의 생명을 딛고서야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세계구조, 국가체제와 경제논리에 반하여 비판적 갈등관계를 지니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헤아린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한국교회는 이 사명으로부터 이미 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

일부라고 말하지만, 보수개신교의 정당정치세력화를 꿈꾸는 자들과 그들의 팔로워들, 초대형교회 만능론과 엘리트즘에 빠져 세계교회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권력지향 개혁파들, 교회밖 상황이 어떻든 담장안 개교회 안녕주의를 소박하게 지키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는 이삼열, 정미현이 말하는 기독교회의 과제수행 주제로는 불가능한 존재들이다. 개신교 신앙과 복음정신을 앞세워, 사회개혁과 민주주의 성장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스스로를 민주주의에 입각한 시민의 소리라며 광범위한 작동체계를 발휘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하나의 작은 무시하고 개탄만 할 현상이 아니다.

한 예로,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성소수자 혐오에 따른 인권정책의 무력화: 인권 조례를 중심으로”라는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한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연구결과보고서¹⁾는 보수 기독교회가 얼마나 반인권적인 집단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고하였다.

“보수 개신교회의 평신도를 중심으로 SNS와 인터넷을 통해 (인권)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지역교회, 의회, 행정기관, 도심지역의 광장 등에서 열리는 집회, 시위, 예배, 기자회견에 나서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이야말로 민주주의에 입각한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이며, 자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진영을 만들고 있다” 또한 “주로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중장년층의 남성목회자들이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지방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과 비/공식적인 면담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²⁾

교회는 더이상 민중지향적이며, 온 피조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지향적 가치를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회를 향하여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만약 아직도 남은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을 품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개혁의 방향을 사회가 아닌 타락한 교회를 향해 바꾸어야 한다.

보수와 개혁을 막론하고 중대형교회, 중노년, 남성, 목회자(신학자포함) 중심으로 세력화된 한국교회와 그들의 ‘팔로워’들의 특성은 오늘의 논지에 따르면 반민중성, 반생명성, 반지속가능성, 반평등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특성들을 안착시킨 거대자본화된 집단적 엘리트즘에 빠진 한국교회 자본집단이 발제자들에 의해 제안된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성장이 지금의 재난을 초래했는데도 계속 성장에서 출구를 찾는 성장중독으로부터 스스로를 욕망에 찌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염병에서 벗어나는 출발인데’³⁾ 한국교회는 위기도, 징후에도 되돌이켜 회생

1)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 비온뒤무지개재단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
http://rainbowfoundation.co.kr/board_NZca38/6037/

2) 한재윤, “성소수자 인권확장을 위한 인권교육” 광주광역시 민주인권과, 인권옴부즈맨 역량강화 워크숍 미간행 자료집, 2020, 12쪽.

3) 조현철, “탈성장, 역병에서 배우기” 녹색평론 175호(2020년 11-12월호)

하기에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집단으로 여겨진다.

이에 나는 진정 발제자들이 누구를 이 글들의 청자로 초대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다.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려면 교회 자체가 이러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연습을 하고 이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정미현의 바람은 진정 가능한 초대일지, 그 바람이 진심으로 가능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묻고 싶다.

5. 2020년 6월에 개최된 EMS(Evangelical Mission in Solidarity) 세계 17인 선교위원회의(Mission Council) 개최예배 설교에서 Bernd Kappes목사(Evangelical Church of Kurhessen-Waldeck)는 “우리 모두는 covid-19라는 같은 폭풍우 속에 있지만 그 모두가 다른 배에 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각 교회는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교회와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눠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EMS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위기에 처한 교회들을 돕기 위한 발 빠른 대처를 위해 독일 내, 외의 회원교회에 지원요청을 했었다. 모아진 성금을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레바논, 남아공, 남수단, 케냐 지역 코로나 관련 13개 프로젝트에 긴급사용하도록 지원하였다. ‘같은 폭풍 속에 있지만 다른 배에 타고 있는 자매형제 교회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위기가운데 협력하는 EMS의 선교적 우정은 더욱 돈독해지고 독일교회의 신앙은 위기속에서 성숙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나는 NCKK가 이런 세계와 교회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고, 절망 위에 다시 일어서서, 이 선언들을 담아 낼 운동으로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 새로운 술을 담은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세계라며 그 주장이 학자와 전문가들의 보편적 인식라고 말하면서도, 지금까지 유지해온 사고와 체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고 근원적 변혁을 시도할 진심이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들에게 물어야 한다. 예수가 타살당하며 죽음으로 부탁한 근원적 변혁과제를 분명히 하며, 그 과제를 실천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내면의 평화영성을 키워야 한다. 정의행동으로 나설 용기를 만들어 표현하고 실천해야 한다. 적당하고 잠정적인 타협은 불가하다. 생명과 삶의 근원적 방향을 달리하는 새로운 교회건설을 시도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성과를 알 수 없어도 끊임없이 실험하는 민주주의’⁴⁾를 교회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6. 근원적 변혁을 시작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다시 모여 시작해야 한다. 그 불가능한 꿈을 현실화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이런 위기속의 한국교회가 개혁되길 바라는 나의 실천으로 신학교수직을 그만두고, 살던 지역의 교회에서도 떠밀리듯 나와 급기야 지난 11월 11일로 현 소속교단을 탈퇴하고자 사임탈퇴서를 교단노회에 제출하였다. 10월 30일에 4인 목회자 이름으로 제출하고 낭독한 ‘교단을 향한 종교개혁선언문’은 교단교회에 대한 나의 마지막 기여 행동이었다. 이에 어이없는 시작을 하고 성과를 알 수 없는 일들을 시도하고자 한다.

- 1) 교회이름으로, 개인의 이름으로 교회재산을 가지지 않는 교회
- 2) 교회자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교회

http://greenreview.co.kr/greenreview_article/2783/

4) 파커 팔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서울: 글항아리, 2012), 15쪽.

- 3) 성직자, 목회자 중심의 위계구조를 변화하는 교회법을 만드는 교회
- 4) 반생태적, 반생명적, 반민중적 교리에 묶인 신학교육을 해방하는 신학교육 기구를 만드는 교회
- 5) 최소단위 모임과 회의, 구조에서도 다양성과 생명의 존재권, 인권을 지키는 교회
- 6) 그리스도인, 교회의 정체성을 성장에 두지 않는 교회
- 7) 그런 세계교회들과 연대하는 교회

온 우주와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정신에 나타난 만유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나갈 교회의 개혁은 새로운 교회로의 탄생으로만 가능하다. 그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자들의 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NCCK는 이런 나의 제안을 숙고하고 함께하길 바란다.

논찬
한국교회와 코로나

최순양
(협성대학교)

정미현 교수는 “민주주의와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개혁”이라는 과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 이 글에서 제안한다. 방역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정부와 교회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독교는 민주주의 정신을 예수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 이후에는 칼뱅주의를 필두로 하는 종교개혁 사상에서 개혁의 정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칼뱅이나 루터보다는 오히려 츠빙글리와 재세레파의 개혁정신을 정교수는 더 주목하고 있는 데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정의의 빛에서 시민적 저항의식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바르트 또한 시민 불복종과 정치적 비판력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신학자로 이 글에서 인용되고 있다. 이러한 신학적 기반에 비추어 오늘날 한국교회가 체제 순응적 태도와 내세주의에 빠져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이에 대해 논찬자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한다.: 2020년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사회와 갈등을 빚는 것은 내세주의와 체제 순응적 태도보다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교회탄압”이라는 명목하게 일고 있는 반정부 운동이 아닐까요? 물론 독재나 잘못된 정치지도부에 대한 반정부 운동(시민 불복종)이 필요했던 시절이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교회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공공성”을 위해서 현장예배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시민의식이 아닐런지요?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저자가 염두해 두고 있는 교회가 갖추어야 할 민주주의적 자세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어서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개혁을 위한 요소 중 하나로 “은사의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여성 지도력에 대한 배제(차별)의 문제를 들고 있다. 여성의 지도력이 아직도 확보되지 못한 점, 재정구조에서 여성에 대한 배제의 문제가 존재하고, 저자는 이에 대해 “할당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을 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로 저자는 “교육을 통한 개혁주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개혁교회, 특히 한국기독교 장로회 등과 같은 진보적 교단에서조차 여성 지도력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젊은 이들과의 대화나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있음을 문제제기한다. 개혁교회를 지식의 민주화, 권력의

나눔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라고 정의하면서 한국교회가 지난 500년 동안 제도화의 과정을 통해 초창기의 동력을 상실하였음을 비판한다.(23쪽) “결과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 배제의 운영체제로 인해 젊은이들이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개교회 구조부터 노회, 총회에 이르기까지 거의 없는 형편”(24쪽)이라고 보면서 이 점에 있어서는 진보나 보수가 비슷하다고 필자는 설명한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공공성, 이타심, 공감능력 등의 단어들은 젊은이들에게 사치스럽게 들리게 되어 버렸고” “현재 대학의 기독 동아리들은 대체적으로 닫힌 보수 교회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대학가의 현실이다.” “젊은 이들 사이에서 더욱 개인주의가 확산되어서 장미족, 멀티 페르소나, 업글 인간을 추구하는 N포 세대의 고충과 의견을 교회 안에서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와 구조가 전혀 갖추어 있지 않다”라고 교회의 문제점을 설명한다.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몇몇 질문을 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젊은 이들이 공공성, 이타심 등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한 것일까? (선입견은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공공적인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현실이나 사회구조가 어떻게 생겨났는 지에 대한 고민은 선행되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았다면 교회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의식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공동체성이나 사회변혁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젊은 이들의 현실적 문제점이 존재한다면 저자는 교회가 이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 저자가 쓴 내용처럼 교회가 젊은이들의 고충과 의견을 귀 기울이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보수적 교회들보다 진보적 교회가 오히려 젊은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이러한 질문들을 제기해 본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생명 중심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교회가 경제불평등이나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주목하지 못하는 점, 낙태나 동성애, 차별 금지법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변화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회는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감을 느끼지도 잘못된 사회를 통감하지도 않고,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도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자는 교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청하는 지가 더 설명되면 좋을 것 같다. 만약 저자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교회가 적극적 행동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면 사안은 사실 ‘생명 중심’보다는 약자우선의 원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닐지 질문해 본다.

이 글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만나는 과제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세분화해서 보여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볼 거리들을 다양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감사드린다.

이삼열 이사장님은 ‘코로나19 시대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는 글에서 코로나 시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를 바꾸어 놓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는 지에 대해서 잘 짚어주고 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동체가 어떤 갈등과 위기를 겪어 되는 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는 세계화와 지역주의, 혹은 국가주의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전 세계가 자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경제의 흐름이 끊기고,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가 더 왕성해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개인의 자유와 전체주의적 안전의 문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전염병을 예방하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안전을 명목으로 감시체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등장한다. 셋째는 방역 대책이 강화될수록 경제적 침체는 가중된다는 것이다. 봉쇄조치와 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를 권장하는 일이 반복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현실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지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는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둘째 사항에 대해서 끝부분에 설명하고 있는데,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통제를 할 경우 이에 대해 따를 수 있는 유연함을 요청하고 있다. 이 문제는 그러나 단순하지 않은 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장(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현 정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보수적 입장에 있는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교회탄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거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만 한다거나 하는 입장을 표방하는 교회는 대부분이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지도자들의 배후에 작동하고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대부분 보수 대형교회의 기득권과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질문하고 싶다.

이어서 저자는 코로나19가 야기한 공동체의 위기와 더불어, 디지털 문명의 발달로 기술혜택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디지털 문명이 가져다 줄 문제, 주체성의 상실 등을 염려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가져 올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용복지제, 기본 소득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등을 위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교회는 어떤 책임의식과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 보증을 받아서 (교회 건물을 사실상 없애서) 가난한 교우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그 교단에서는 이 목사님을 징계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교회는 코로나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돌보기보다는 ‘예배’나 ‘교회 건물’을 지키려 하고 이를 막았을 때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사고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을 지가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한 방법으로 생태계의 온전한 보존과 파괴의 방지를 제안한다. 지구의 생명을 지켜야 인간의 생명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 라스무스처럼 “생태론적 신학”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리하자면, 세계화의 흐름이 멈춰지고 자국중심주의로 되어가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희생이 요청되는 시기 속에서, 방역을 강화했을 때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 교회는 어떤 변화와 실천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묻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은 독자가 응답해야 할 것으로 남는다.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문명과 사회를 위해서 과학 기술의 문명이 가져다 주는 장점과 단점 사이에서 어떻게 인간의 주체적 삶을 세워나갈 것인가의 과제가 남는데, 필자는 여기에 더하여 인간이 누구인가의 문제, 인간 고유의 고유성이나 주체성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학기술과 디지털 문명 시대가 누구에게는 혜택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그들이 될 지의 문제를 진지하게 질문하는 것도 교회가 감당해야 할 큰 사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이 문제는 더 침

예화된 빈곤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의 초점이 옮겨가야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옮겨 간다. 결국 저자가 표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복음에 따라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증거하고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자에게 다시 묻는다면 이 지점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보고 싶다.

이 글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겪는 현실을 다방면에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사회 현실을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더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논찬

코로나19, 교회,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그림자

한수현
(감신대학교)

정미현 교수님의 글을 읽으며 먼저 본인의 종교 개혁과 유럽의 정치사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매우 부족했음을 절감했다. 특히, 칼 바르트의 이야기에서 바르트가 설교를 정치적 해석이나 선언의 장소로 삼지 않았다는 말이 인상깊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만으로 교회의 강단은 국가의 정치에 대한 쏘는 가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바르트의 주장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개혁주의적 저항 정신"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18) 과거에 필자가 "20세기 신학"이란 박사 필수 과목을 수강했을 때, 온라인 과정을 위한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했는데, 지도교수가 정한 패스워드는 '바르트'였다.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필자에게 지도교수는 "바르트의 책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던 기억이 났다. 그와 비슷한 말을 신학교시절 장 칼뱅에 대해 들었다. "장 칼뱅의 책을 읽지 않고 그를 판단하지 마라"였다. 정미현 교수님의 글에서 그 둘은 만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교수님은 근대 서구 유럽의 법체제와 민주주의 전통에 종교개혁이 미친 역사적 영향을 좀 더 깊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교수님은 홀드리히 츠빙글리가 국가와 교회의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 시민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국가 정치와의 비판적 연대를 강조했다고 말하고, 이후 바르트에게서 같은 맥락을 찾고있다.

교수님께서서는 이런 개혁교회의 저항 정신이 한국교회가 찾아야 할 중요한 전통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교회 내 민주주의를 강조하는데, 이를 크게 공동체 내의 소통, 변화, 화합으로 보고 있다. 소통을 위해서는 "은사의 다양성의 인정", 변화는 "교육 내용의 전환", 화합을 위해서 생명 중심의 문화확산을 말했다. 앞의 소통과 변화에 대한 부분에서 교수님은 여성신학의 역할을 강조한다. 여성 안수의 보편화 없이 한국 교회의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는 말씀에 가슴 아픈게 동의한다.(21) 카리스마의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 함께 교회를 이루는 희망을 그려본다. 또한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 교회와 신학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운동으로 여성신학을 말씀하신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통한 담론 운동과 이론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는 현실 참여 운동이 조화를 이룬 여성신학의 역사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열쇠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최근의 부동산, 노동자의 인권과 같은 경제적 문제와 낙태죄와 차별 금지

법의 법제화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생명중심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삼열 박사님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공동체 갈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세계주의와 국가주의의 갈등,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갈등, 방역대책과 경제 정책 사이의 갈등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갈등과 모순의 시대에 성숙한 시민과 교회는 국가가 끊임없이 감시와 통제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로 변하지 않도록 견제해야 할 것이다. 결국 경제와 안전 사이에 나타나는 가치모순을 조정하는 주도권을 국가가 아니라 시민들이 짊어 수 있을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란 말이다. 또한 이에 교회가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삼열 박사님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지속가능한 문명"을 향한 기회로 삼자고 말한다.(11) 그리고 이를 위해 세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는 과학의 결과물들과 정신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담론을 준비하는 것이다. 둘째는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채우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이루는 것, 셋째는 생태론적 문명론을 통해 지구의 환경을 지속가능하도록 보존하는 일이다.(12)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 철저한 자기비판과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13)

두분의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나 한국 교회의 현재 상황이 이때까지 선명하게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국가와 교회의 역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복지와 경제정책의 조화에 대해 요즘처럼 피부에 와 닿는 경험을 해본적이 많지 않았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위기를 통해 기회를 얻게 된다는 말이기 보다, '위기'라는 창을 통해 스스로의 현실을 보게 된다는 의미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두분의 글을 통해 우리 곁에 온 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눈뜨게 된 위기와 그 위기속에서 자취를 감추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 조금 더 말해보겠다.

위기 담론을 말할때, 위기 관리를 말할때 요즘 등장하는 말이 있다.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작은 국가를 강조하는 말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숨어 있을 것이다. 세계의 미래는 자유 시장 경제가 책임질테니, 국가 정치는 위기관리에 소임을 다하란 무언의 요청이 있다. 여기서 위기관,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모순과 갈등으로 촉발된 모든 것이다. 평등한 경쟁이란 이름뒤에 규제가 사라진 링위에 강자와 약자간의 맨손 격투가 있다. 균등한 기회란 유혹속에 감과 울, 금수저 흠수저란 이데올로기가 있다. 신자유주의가 벌이는 위기 담론의 향연에 국가 조직과 언론 기관의 역할은 미약하다. 약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가장 먼저 보호 받아야 할 약자를 선택하길 강요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약자를 위해 침묵해야 하는 현실이 계속된다. 모든 것이 위기고 탈출구는 없다는 말잔치 속에 희생자는 언제나 여성과 빈곤층이다. 나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대의 모순과 갈등을 두 분이 코로나19 팬데믹이란 창으로 잘 말씀해주셨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조금 더 굳이 첨언한다면 신자유주의 시대에 그려왔듯,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가장 문제적인 집단인 가족이란 공동체에 대해 말하고 싶다.

최근 국가가 시행했던 긴급재난지원금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공동체가 가족이듯이 가족은 코로나 시대에 단절되어 가는 개인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가족은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갈등을 고스란히 떠안는 공동체이자, 국가가 스스로의 책임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떠넘기는 공동체이다. 여성의 문제가 가족으로 들어가면 여성은 사라지고, 맞벌

이 노동자나 자녀의 사회화를 위해 무한한 노동을 담당하는, 게다가 자녀 양육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과 죄책감을 떠맡는 감정노동과 육체노동의 극한으로 내몰리는 한 인간만이 남는다. 누가 가족을 아름답다 했는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여성은 온라인 교육을 위한 아이 교육의 첨병, 학생인 자녀의 온갖 코로나 블루를 받아주어야 하는 감정 노동자, 쪼들어 가는 가정 경제에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걱정이든 해야 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파편화속에 가족은 모든 부작용을 떠안는 장소가 되어간다. 가족을 위해 직장에서는 강한 노동자, 목소리를 높이는 여성이 가장 여성다운 여성이란 이데올로기는 각종 문화매체에서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그런 강한 여성이 신자유주의를 위해 살과 뼈를 갈아넣어야 할 곳은 가족이다. 최근 한국의 여러 위기를 다룬 영화들에 나타나는 여성들은 하나같이 강한 여성에 희생정신까지 겸비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마지막에 가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국가나 선한 영웅들에 의해 구원받는다.

그리고 필자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가족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기관이 한국의 교회란 사실이다. 정미현 교수님이 생명 중심의 패러다임을 말씀하실 때, 언급하신 낙태와 차별금지법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교회의 담론은 이상적 가족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고집에서 나온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상적 가족에 대한 고집이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떠받치는 여성들과 가족 구성원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겉으로는 교회와 국회의 충돌, 교회와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의 충돌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위기 상황을 대신 떠안을 가족 공동체의 희생에 대한 문제가 있다. 아마 신자유주의적 정부는 이러한 교회와 국회의 갈등을 걱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은 더 큰 위기 의식을 줌으로 늘 상 강조하던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가족,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고민과 해결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정미현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던 슬로야보르 지젝이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에 대해 시도한 비평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위 근본주의 기독교를 '도착주의적'이라 평한 것이다. 원래 이 표현을 지젝은 스탈린주의에 자주 썼던 표현이었다. 원래 공산주의의 목적이 인간의 자유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산당에 반대하는 사람들, 소위 불순분자들의 자유와 생명을 공산당의 존립을 위해 마음껏 유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증상을 지젝을 '도착적' 증상이라 말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신이란 단어를 지워버렸지만 스스로 신이 되어 타자를 억압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대한 진단이다. 때때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생명보다 가이사의 것인 동전을 더 사랑한다. 생명을 위해 세운 교회는 타인의 생명과 아픔에는 둔감해졌다. 신자유주의속에 스러져 가는 생명에 대한 소명이 교회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들은 방역과 안전이란 이름으로 수식간에 모임과 예배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위기 관리에서 종교는 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 이상을 하고 있지 못하며 스스로 거룩하다 믿어온 예배와 예식은 언제든 박탈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종교적 형식에만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삼열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속가능한 새로운 문명의 열쇠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은 있을 것이다. 두 분 모두 말씀하신 변화를 위한 교회의 가치, 정말로 지켜야 하고 절대 빼앗기지 않을 가치를 다시금 고민하기 기회를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향후 일정

| 장소와 시간

- 1) 장소: 평창동 대화의 집 (시즌1) & 기독교회관 조예홀 (시즌2, 특별프로그램)
- 2) 시간: 오후 6시 시작
- 3)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
(4차 - 12월 14일 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내용

1) 시즌 1

1차 - 9월 14일(월) 오후 6시 “코로나19 이후 세계와 교회”

: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세상 속에서 그에 걸맞는 삶과 신앙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도모하는 총론적 성격의 1차 토론회이다. 앞으로 다루게 될 토론주제들에 대한 개괄적 소개와 그것이 지닌 의미에 대해 전망한다.

- 인사말: 채수일(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이홍정(NCCK 총무)
- 발제: 김준형(국립외교원, 정치학) 양권석(성공회대, 신학)
- 논찬: 홍인식(한국기독교연구소) 송진순(이화여대) 이상철(크리스찬아카데미)
- 정리와 총평: 박창현(감신대)

2차 - 10월 12일(월) 오후 6시 “코로나19 이후 생명과 자연에 대한 성찰”

: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연구보고에 의하면 생태계의 파괴와 기후 변화의 문제가 급변 사태와 긴밀하게 연동된 문제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위기로 몰리는 생명현상과 자연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다. 2차 토론회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지니고 생명과학자를 초

대해 바이러스를 포함한 생명일반의 문제를 다루고, 그에 대한 다방면의 신학적 진단과 성찰의 시간을 마련한다.

- 발제: 유지환(연세대, 의생명과학) 김경재(한신대 명예교수, 신학)
- 논찬: 백소영(강남대) 이진형(기환연) 김정원(향린교회)
- 정리와 총평: 이은경(감신대)

3차 - 11월 9일(월) 오후 6시 “코로나19와 한국사회 현상학”

: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외적으로 K-방역의 선진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의 사회시스템과 그를 지탱하고 있는 전통과 배경에 대한 관심과 논의들이 많이 등장했다. 한편 신천지와 일부 개신교의 파행적 행보는 한국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었다. 이렇듯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민낯과 대면할 수 있었고, 이는 종교사회학적으로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을 요청한다. 3차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와 한국사회 현상학”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시대 사회현상을 폭넓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 발제: 김선욱(숭실대, 철학) 이숙진(이화여대, 신학)
- 논찬: 황용연(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김혜령(이화여대) 나성권(성공회 교육국)
- 정리와 총평: 김희현(향린교회)

4차 - 12월 14일(월) 오후 6시 “코로나19 시대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 K-방역으로 부각된 한국사회의 공동체주의와 그와 대척점에 서있는 개인주의 사이 발생하는 갈등과 조화의 문제를 다룬다. 코로나19는 방역을 위한 국가주의의 등장에 대해 옹호와 견제하는 그룹사이 이견을 노출시켰다. 이는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사이 발생했던 사회철학의 오랜 난제이기도 하다. 교회 역사의 발전과정에서도 공동체내 의사소통과 결정의 문제는 중요한 교회사적 사건이었고 교회론의 주제였다. 코로나19는 교회와 사회에서 예외상태가 등장했을 때 공동체의 운영과 화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둘러싼 문제를 제기하였다. 4차 토론회는 “코로나19 시대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는 주제로 이 문제를 다룬다.

- 발제: 이삼열(대화문화아카데미, 사회철학) 정미현(연세대, 신학)
- 논찬: 오현선(전 호남신대) 최순양(협성대) 한수현(감신대)
- 정리와 총평: 박도웅(감신대)

2) 특별 프로그램 - “코로나19 이후 사회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발표

■ 일시와 장소: 1월 11일(월) 오후 6시

/ 종로5가 기독교회관 조예홀

☞ 기사연 프로젝트: “코로나19 이후 사회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라는 제목으로 정치(이상철), 생태·경제(신익상), 한반도 및 국제관계(김상덕), 젠더 및 사회 취약계층(송진순), 교회 및 신앙관(이민형) 등 6가지 분야에 걸쳐 1000명의 개신교인을 상대로 코로나19 이후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2020년 말에 보고서 형식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시즌 1을 마치고 이에 대한 결과발표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시즌 2

5차 - 2월 8일(월) 오후 6시

“언택트 사회 속에서 새로운 신앙을 묻다”

: 코로나19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언택트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고 있다. 종교분야에서도 언택트 양상은 두드러진 특색으로 자리잡아 기존의 신앙생활과 패턴에 많은 변화의 조짐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전개되고 있는 언택트 상황 속에서 종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새롭게 조성된 상황은 우리의 기존 신앙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신앙패턴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5차 토론회는 “언택트 사회 속에서 새로운 신앙을 묻다”를 주제로 코로나 이후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발제: 조한혜정(연세대 명예교수, 문화인류학) 정경일(새길기독사회문화원, 신학)

■ 논찬: 김상덕(기사연) 조성돈(실천신학대학원) 박홍순(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 정리와 총평: 이민형(기사연)

6차 - 3월 8일(월) 오후 6시

“코로나19와 대안적 경제 - 생태적 순환경제로의 전환”

: 코로나19 위기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 상황을 초래함과 동시에 기존의 경제질서에 대한 근본적 재편을 요청하고 있다. 공급, 수요, 소비가 한꺼번에 붕괴되는 전면적 위기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질서는 과연 어떻게 재편되어야 할까?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부추기는 가운데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움아매운 경제체제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6차, 7차 토론회는 새롭게 구성해나가야 할 대안적 경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 발제: 홍기빈(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경제학) 강원돈(한신대 은퇴교수, 신학)
- 논찬: 홍인식(한국기독교연구소) 김유준(연세대) 신익상(성공회대)
- 정리와 총평:

7차 - 4월 12일(월) 오후 6시

“코로나19와 대안적 경제 -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 코로나19 위기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 상황을 초래함과 동시에 기존의 경제질서에 대한 근본적 재편을 요청하고 있다. 공급, 수요, 소비가 한꺼번에 붕괴되는 전면적 위기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질서는 과연 어떻게 재편되어야 할까?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부추기는 가운데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옴아매온 경제체제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6차, 7차 토론회는 새롭게 구성해나가야 할 대안적 경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 발제: 이승윤(중앙대, 사회복지학) 최형묵(민중신학회, 신학)
- 논찬: 허석현(민중신학회) 강신환(이화여대) 유승태(꽃피는신뢰)
- 정리와 총평: 양만호(노원 나눔의집)

8차 - 5월 10일(월) 오후 6시 “마무리 대토론”